

원희룡 前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인 조사가 1년만에 이뤄졌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원희룡 前 장관은 같은 달 24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당협위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국민의힘 외곽 단체 세미나에서 “제가 국토부 장관을 하는 마지막 1시간까지 국민들의 민생, 지역 현안, 교통과 인프라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여당에 대한 지지,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더 이상 표현은 살짝 자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당과 총선 후보들의 공약·민원과도 맞물려 있는 노골적인 관권선거 발언을 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작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8월 28일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원희룡 전 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고발이 1년 지나서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수사가 늦어진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